

법치농단저지대책단		보도자료		더불어민주당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 량	총 2쪽	
배포일시	2022. 07. 13.		문 의	강래원 비서관(박범계의원실)	
전 화	02-784-6960~2		메 일	pbk705@naver.com	
주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837호				

법치농단저지대책단, 감사원의 인사 사화·표적감사에 항의방문

국회 더불어민주당 법치농단저지대책단 박범계의원, 송기헌의원, 김의겸의원, 강준현의원은 2022년 7월 13일 감사원을 방문하여 감사원의 전 정부를 향한 표적 감사, 인사 사화(士禍)에 대하여 항의하였다.

단장을 맡고 있는 박범계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유병호 신임 사무총장이 부임한 후 전임 정부 임명 1급 직원 대부분이 명예퇴직하는 등 인사 사화가 발생하고 있어 감사원 내부가 크게 요동치고 있는데, 감사원은 이에 대해 일신상의 사유에 불과하다고 답하고 있다. 또한, 전임 정부 임명 공공기관장이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KDI 등 기관에 대해 표적 감사를 진행하며 정부와 여당의 전임 정부 인사 찍어내기 등에 사실상 행동대장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박범계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감사원이 KDI 및 방송통신위원회 감사를 진행한 경우는 특정 구체적인 분야 또는 산하 기관에 대한 감사에 국한되었다. 그러나 최근 감사원이 KDI에 제출요구한 자료는 일반 현황 및 회계·인사 관련 등의 자료로 마치 전방위적인 감사를 예고하는 듯한 모습이었다.

감사원 김경호 기획조정실장은 박범계 의원의 감사원에서 직무감찰을 다루는 공직감찰본부장과 대검찰청에서 수사정보를 담당하는 수사정보담당관실(현재 정보관리담당관실로 축소) 간의 협의체가 있고 회의가 개최되냐는 질문에 비정기적인 협의체 차원의 회의가 개최된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협의체는 현 정부에서 검찰이 수사정보 수집을 확대하려고 한다는 상황에

서 ‘여론몰이-감사-수사개시’라는 사실상의 짝짜미 협의체가 가동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

또한 전임 정부를 향한 표적감사를 지휘하고 있는 유병호 사무총장의 주취폭력 의혹과 관련하여, 감사원에서는 취객으로 오인하여 신고가 됐고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하였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간호사가 환자를 취객으로 의심하였다는 점이나 이미 입원한 병원을 다시 퇴원해서 수술을 다른 병원에서 받았다는 점 등에서 해명의 진실성이 의심되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실제 잘못 신고된 것이라면 경고나 훈방으로 마무리되어야 하는데도, 유 사무총장 사건은 경찰에서 입건을 하고 조사를 한 후, 검찰의 무혐의 결정까지 이루어졌다. 형사사법절차가 모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감사원의 해명은 앞 뒤가 전혀 맞지 않는다 할 것이고, 사건의 전말이 의심 없이 밝혀져야 할 사건이다.” 라고 하였다. <끝>